

## 요약

북한의 만성적 식량난이 20년째 접어들고 있다. 1990년대의 기아 사태로 북한 인구의 5%에 해당되는 백만의 사람들이 죽었다. 북한 당국은 대량 아사가 자연재해와 외부 요인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몇 가지 점에서 언어도단이다. 식량 생산의 감소와 국가 공급 체계의 붕괴는 1995년 홍수 이전부터 발생했다. 북한 정부도 충분한 식량 공급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는 데 소홀했다. 만약 북한 당국이 식량을 충분히 수입한다거나 국제 기구등의 식량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라면 식량 부족과 그로 인한 대량 아사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최악의 기아 사태 당시 가장 어려운 지역에 식량이 가는 것을 봉쇄했다. 또 외부 식량 지원이 시작 되자마자 식량 수입도 줄여 버렸다.

식량난 시기 동안 북한 주민들은 자구책을 강구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북한 사회는 아래에서부터 위로의 시장화 현상이 발생했다. 이러한 시장화 현상은 2002년 북한 당국의 경제 개혁 조치로 승인되었다. 농업정책 실패와 식량 자급자족이라는 잘못된 정책 때문에 발생한 사회주의적 식량난은 이제 과도기적 시장 경제에서 볼 수 있는 만성적인 식량난이라는 문제로 성격이 변화한 것이다. 북한 당국의 불완전한 개혁으로 인해 식량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도시의 비지식인 계층들은 식량 부족으로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

세계 공동체는 북한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아주 관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0년 동안 20억\$ 이상의 식량 지원을 해왔다. 미국은 식량 200만톤에 해당하는 6억\$ 이상을 지원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식량 지원 과정의 매 순간마다 장애물을 조성해왔다. 따라서 10년 동안 지원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이 지원은 투명성과 효율성에 있어서 국제 기준에 터무니없이 못 미치고 있다. 50% 이상의 지원 물량이 그 정당한 수혜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원상의 문제, 북한과의 외교적 갈등, 또 세계 다른 지역에서의 또 다른 식량 문제 등 때문에 식량 지원 단체와 국가들의 북한에 대한 인내심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최근에 WFP를 통한 다자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목표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은 이러한 부족분을 한국과 중국의 직접 지원을 통해 메꿀 수 있었다. 한국과 중국의 직접 지원은 충분히 감독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WFP와 다른 다자적 지원 주체들의 투명성 감시, 효율성 증진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북한 식량과 관련한 문제들은 북한의 정치적 상황을 떼어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인도주의적 지원과 인권 문제는 완전히 분리된 문제가 아니다. 북한은 그 정권의 성격과

관계없이 1990년대에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 최소한의 정치적, 시민적 인권이 보장되어 있었다면 이 같은 대규모, 장기간의 식량난과 기아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